

2023

11

Monthly  
Magazine

통권 240호

2023-11

세무회계경영저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정보]

- 한국회계기준원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 공개(중소벤처기업부)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고용노동부)
-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고용노동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라-0129 · 등록일 2003  
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  
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건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 안세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0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2년 매출액 650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무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 · 금융자문 · 인수합병 M&A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중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정 훈 · 유환철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경호 · 고두환 · 공희성 · 권창현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배익권 · 송형곤 · 설찬수 · 양승민 · 오승혁 · 유진우 · 유지운 · 윤형민 · 윤훈기 · 이만선 · 이마지 · 이샤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정운 · 제갈원구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진수미 · 최영진 · 최진강 · 표정협 · 한상표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이현섭 · 배문호 · 최민욱 · 황준호 · 정호신 · 박지은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현 · 설찬수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김수영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운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허정식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이원재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이승환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중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 1.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2.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3.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4.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5.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6.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7.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8.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9.M&A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10.화의·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11.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12.기타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분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1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금)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 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 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 거래세 신고납부
20(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0(목)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액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 계액 신고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 3기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 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사 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창업 후 추가조달자금의 운영전략과 세금비교 ..... 2
- 청년창업자와 관련된 세금특례들 ..... 3
- 사업상 신용카드 구입지출금액의 매입세액불공제와 업무추진비 분류 ..... 4

## 이달의 특집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 5

## 회계정보

- 한국회계기준원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 118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고용노동부) ..... 121

## 노무정보

-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고용노동부) ..... 130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10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창업 후 추가조달자금의 운영전략과 세금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3/10/11일자 통권 1644호(표지)

개념, 구분	창업법인의 신주발행, 증자	창업자 개인의 기존 보유 구주매각
방법개요	창업법인이 신주발행 유상증자하면서 주당 10배, 30배, 100배 등 할증발행	창업법인의 기존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50% 이하를 외부투자자에게 매각해 동업주주 확보
자금운영	증자신규자금 전액이 회사로 귀속 유입	신규투자자금이 창업주주 개인에 귀속됨 (회사가 자금 필요한 경우는 주주자금 가수금 차입함)
재무제표	자기자본 충실로 재무구조 개선되고 기업신용도 향상	투자금액이 회사에 입금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 안됨(대주주 개인자금 유리)
필요한 경우	창업법인의 원부자재 구입, 설비투자가 필요한 경우	창업주주의 개인부채가 많은 경우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50억 (대) 증자자본금 5억 주식발행초과금 45억	회사의 회계처리는 없고, 주주변동신고서 제출
세금신고	기존 주주의 양도증여 아니고, 신주인수포기시 타인증여 문제 없음 (특수관계주주는 증여의제 신고)	창업주주 구주매각의 양도소득세 신고 • 중소기업 주주(매각가 - 액면가)×11% • 비중소기업주주(매각가 - 액면가)×22%

창업주주 보상	법인자금으로 받는 보수향상 가능 원천세와 4대보험 등 부담	개인주식매각으로 회수하였으므로 보수향상가능성 낮음(세금낮음)
투자자 입장	신규투자자금이 모두 회사에서 운용(안심)	신규투자자금으로 대주주 개인은 제3사업 가능성(불안)
실제관행	기업성장 후 상장유도하는 경우	동업자 소수의 공동운영방향 (구주매각 + 신주발행 병용함)

## ◎ 청년창업자와 관련된 세금특례들

- 안세재경저널 2023/10/18일자 통권 1645호(표지)

개념, 구분 규정	구체적 조세혜택 내용, 관련 제한조건 등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조특법 30조의5)	토지 건물제외(창업자금 50억원(10명 이상 고용 100억원) - 5억원)×10% 증여세만 부담 ① 18세 이상 내국인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 ③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안함 ④ 단, 상속재산에는 선증여재산으로 가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조특법 30조의6)	세법상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주식 중(가업자산 상당액 - 10억원)×10%, 과세표준 60억 초과액부터는 20%(한도 부모 10년 이상 경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안함 ② 단, 상속재산에는 최종 합산함
가업상속공제적용 (상속·증여세법 18조의2)	세법상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시 일반공제 + 특별공제 적용(10년 이상 경영 300억,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① 자산 40% 처분 금지 ② 상속인의 가업종사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세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이익 발생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기업), 50% 감면(창업보육센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근로자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창업업종의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간 면제 +

지방세 감면	2년간 50% 감면
--------	------------

◎ 사업상 신용카드 구입지출금액의 매입세액불공제와 업무추진비 분류  
- 안세재경저널 2023/10/25일자 통권 1646호(표지)

개념구분	세금쟁점문제와 관련규정 등
신용카드 증빙의 위상	대금결제수단 + 거래증빙(=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 기능 : 부가세법 제36조)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자	일반소비용품업자(소매, 음식점, 숙박, 생활서비스업,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사업 등 : 부가세법 제36조)
매입세액공제규정	일반소비용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되는 매입세금계산서임(= 부가세법 제46조제3항)
매입세액공제가능	매출수입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 사업상의 구입·지출 등, 적정대응원가,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됨
매입세액불공제됨 (부가세 추징됨)	부가세법 제39조 : 합계표 미제출, 사실과 다른 거래, 신용카드전표 없는 경우, 사업무관지출, 소형승용차 관련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유사비용지출, 면세사업용지출, 토지관련지출 : 해당지출금액의 10% 매입세액공제부인됨)
기업업무추진비 분류	사업상 필요비용 아니고, 접대·교제·사례 등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됨(법인세법 제25조 기타사외유출임)
사용자의 사적 지출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리(근로자는 상여처분 근로소득합산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증가 : 소득세법 제35조, 그 외는 기타소득처리 과세됨)
일반소비사업자의 부가세액포괄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급한 발급결제금액×1.3%(24년부터는 1%≤연 500만원 한도) : 부가세법 제46조



이달의

특 집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

## 1편 일반사항

### 제1장 조세제도 일반사항

#### 1-1 주요 용어

##### ● 개념 및 용어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 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용 어	정 의
내 국 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는 사망일까지 또는 출국한날까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손 금	개인의 필요경비 증가 및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세 액 공 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세 액 감 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 명시
이 월 과 세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 개인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1-2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에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 조세감면의 유형

-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 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 ●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도권 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조세감면의 유형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1-4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 최저한세란?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7%(일반기업 8%~17%)
  -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 ● 주요 적용대상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의 3	중소·중견기업 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7조의 4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 ●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 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 1-5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 6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 대상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에너지절약시설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제1항 제1,2호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에너지절약시설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중설투자	대체투자	중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X	O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O
중소기업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O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 억제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li> <li>○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li> <li>○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li> <li>○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li> <li>○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li> </ul>
성장 관리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li> <li>○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li> <li>○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li> <li>○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li> <li>○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li> <li>○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li> <li>○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li> </ul>
자연 보전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li> <li>○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li> <li>○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li> <li>○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테리만 해당)</li> </ul>

## 제2장 기업의 분류

## 2-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

## ● 중소기업의 범위

(1)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⑱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㉑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㉒ 수도업	E36	
㉓ 건설업	F	
㉔ 도매 및 소매업	G	
㉕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㉖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㉗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㉙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㉚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㉛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제외)	
㉜ 운수 및 창고업	H	
㉝ 정보통신업	J	

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㉕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㉖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제외)	
㉗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㉙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㉚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㉛ 금융 및 보험업	K	
㉜ 부동산업	L	
㉝ 임대업	N76	
㉞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일 것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22)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이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에 해당 할 것.

이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봄.

○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자서비스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 기준)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업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자서비스업에서 제외

## ●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유예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p>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p> <p>①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p> <p>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p> <p>③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이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p>
유예기간 미적용	<p>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합병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p> <p>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p> <p>③ 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중소기업 간주	<p>중소기업이 다음 사유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p> <p>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p> <p>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과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p>

-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②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④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2-2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② 음료 제조업	C11	
③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⑦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⑨ 1차 금속 제조업	C24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20억원 이하
⑪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⑫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⑬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⑮ 가구 제조업	C32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⑰ 수도업	E36	
⑱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⑲ 광업	B	
⑳ 담배 제조업	C12	
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㉒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㉓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㉕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㉖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㉗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㉙ 건설업	F	
㉚ 운수 및 창고업	H	
㉛ 금융 및 보험업	K	
㉜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㉝ 정보통신업	J	
㉞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제외)	30억원 이하
㉟ 부동산업	L	
㊱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㊲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㊳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㊴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㊵ 숙박 및 음식점업	I	
㊶ 교육 서비스업	P	
㊷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㊸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영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2-3 중견기업의 범위

### 조세지원을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

요건	구체적 내용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㉕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매출액기준	3천억 원 미만(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5천억 원 미만)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

요건	구체적 내용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주된사업기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㉕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2-4 창업기업의 범위

### 조세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의 범위

-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포함)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조 세 특 례 제 한 법	<p>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li> <li>•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①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li> </ul> <p>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p> <p>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p> <p>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p>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p>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li> </ul> <p>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p> <p>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p> <p>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p>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p>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p> <p>②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③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④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⑤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⑥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⑦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p>

## 2-5 벤처기업의 범위

### 조세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범위

□ 다음의 (1)의 기업규모에 해당하면서 (2)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구 체 적 내 용
(1) 기업규모		중소기업일 것
(2) 유형	특정투자기업	특정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이 10%이상일 것
		문화상품 제작자 중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이상일 것
	혁신성장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특정투자자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벤처투자조합,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한국벤처투자,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⑦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등록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함

## 2편 기업성장 조세지원

### 제3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조세 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사항					중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	20	15	30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③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④임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⑤광업		광업	B	1,000	80				
	⑥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	120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				
			가구 제조업	C32		120				
			식료품 제조업	C10	1,000	120				
			담배 제조업	C12		8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80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000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8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1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0	80				
			음료 제조업	C11		1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⑦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E	800	30				
	⑧건설업		건설업	F	1,000	80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⑩출판업		정보통신업	J	800	50				

구 분	조세 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 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⑪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정보통신업	J	800	50	-	20	15	30
	⑫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⑬그 밖의 과학기 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⑭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⑮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포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⑯ 콜센터 및 텔 레마케팅 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⑰ 직업기술학원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업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⑱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 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 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 선법)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 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임대업	N76	400	30				
	⑲ 주문자상표부 착 방식에 따른 수탁 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	80				
	⑳ 자동차정비 공 장운영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 비스업	S	600	10				
	㉑ 선박관리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㉒ 관광사업(카지 노, 관광유흥음식 점업 및 외국인전 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여행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야 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관광유람선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	20	15	30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 미널시설업, 관광캐도업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관광사진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M	600	30				
	㉔노인복지시설 운영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Q	600	10				
	㉔재가장기요양 기관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Q	600	10				
	㉔ 전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운영업	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 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 의 개발 및 보급사업 ㉔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 재의 연구개발사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㉔ 경비 및 경호서비 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㉔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㉔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Q	600	10				
	㉔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임대 한정	임대업	N76	400	30				
	㉔ 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M	600	30				
	㉔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㉔ 사회교육시설, 직 원훈련기관, 기타 기 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㉔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	20	15	30
	㉕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L	400	30				
	㉖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1,000	120				
	㉗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일반감면율의 50%를 감면	운수 및 창고업	H	800	80				
	㉘자동차 임대업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	임대업	N76	400	30				
도 매 등	①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	50	-	10	5	10
	②의료기관운영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 차지하고,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	10				

● 지원 내용

① 요약표

구 분		감 면 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알뜰주유소 전환 시 감면율 우대

- 2022년 중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경우 20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감면율에 10%를 추가한 감면율을 적용
- 소기업 감면율 : 20%, 수도권 외 중기업 감면율: 15%, 수도권 중기업 감면율: 10%

④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 유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 질문과 답변

질문 1. 저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 B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20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 9월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폐업 시 2021년 9월말까지 매출액이 45억원이고, 2021년 10~12월까지 법인의 매출액이 15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환산매출액은 각각 60억원(45억원\*12/9), 60억원(15\*12/3)이므로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4. 저희 법인은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당해 법인세 신고 시 도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 사업연도 동일 사업장의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문 5. 주식회사 절세의 재무부서 인턴사원 나인턴은 업무파악을 위해 2021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 중 2021년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나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20년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세액감면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20년으로 완료되어 2021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관련 내역을 상담하였습니다.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

한후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감면내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절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인턴사원이었던 나인턴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 3-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 ● 유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 정당한 사유(폐업, 사망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질문 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4.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21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입 및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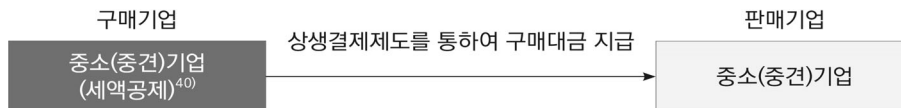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충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충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3-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외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지원 내용**

- 세액공제금액(①+②+③) : 상생결제 지급금액 X 지급기한별 공제율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

$$[ \text{상생결제 지급금액} \text{㉠} - \text{전년대비 현금성결제금액 감소금액} \text{㉡} ] \times 0.5\%$$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6~30일 이내인 지급금액(㉢)

$$[ \text{상생결제 지급금액} \text{㉢} - \text{㉡가 ㉠을 초과하는 금액} \text{㉣} ] \times 0.3\%$$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31~60일 이내인 지급금액(㉤)

$$[ \text{상생결제 지급금액} \text{㉤} - \text{㉣가 ㉢을 초과하는 금액} ] \times 0.1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3-4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과세
-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 사회적기업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

### 3-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임 금	장애인 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과세
-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

### 3-6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 지원 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 ● 용어 해설

-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5년 1월 1일
  - ② 2023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 ③ 2022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① 과세표준 : 120,000,000
  - ② 산출세액 : 12,000,000
  - ③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
-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2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 $$2022년 산출세액 - (2022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times 2022년 법인세율$$
-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times 10\%$$
- $$= 5,000,000$$
- ② 2023년 환급한도액 :  $12,000,000 - 8,000,000 = 4,000,000$
- ③ 2023년 환급신청액 :  $\text{Min} [ \text{①}, \text{②} ] = 4,000,000$

### 3-7 대손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 지원 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 받음

#### ● 유의사항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결산조정사항)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 3-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지원 내용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①	3,600만원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초과)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초과) × 0.03%

● 유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 제4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 4-1 통합투자세액공제

## (신설 — 종전투자세액공제 관련제도 전면개편)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④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 지원 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국가전력기술사업화시설	
	공제율	2023년	공제율	2023년	공제율	2023년
중소기업	10%	12%	12%	18%	25%	25%
중견기업	5%	7%	6%	10%	15%	15%
일반기업	1%	3%	3%	6%	15%	15%

- 추가공제 :

$$\left( \frac{\text{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text{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right) \times \begin{matrix} 3\%(\text{국가전력기술} \\ \text{사업화시설:4\%}) \end{matrix} \quad [2023년 :10\%]$$

단,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



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 감면 세액 추정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은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정  

$$\text{공제받은 세액} \times (\text{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times 1\text{일 } 10\text{만분의 } 22 (\text{연 } 8.03\%)$$
-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신청가능)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보관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 3

신 설	종 전
통합 투자 세액	2021.12.31. 까지 투자 완 료분 선택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li> <li>•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li> <li>•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li> </ul>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li> <li>•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li> </ul>
----	----	--

### ● 용어 해설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4-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 지원 대상(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및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 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 ● 지원 내용

#### • 해당 기업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66)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공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중소기업	3%	3%
중견기업	1%	2%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 ● 질문과 답변

질문 1. 재무기능만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올해 초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ERP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만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3.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겸 동전 교환기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4-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 지원 대상 (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 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⑤ 안전설비투자
  -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 지원 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대상 시설	세액 공제 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7%	3%	1%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10%	5%	1%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 어린이집	10%	10%	10%
⑤ 안전설비투자	10%	5%	1%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

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 ● 용어 해설

-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 적합 시설로 한정),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
- ⑤ 안전설비투자 :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
-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 질문과 답변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 중고품 1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떻게 있을까요? 2021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종전 3년간 시설 투자 이력은 없음)

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을 신규로 구비하는 경우에 환경보전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X ( ①, ② ) = 8,000,000원

-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2021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21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10% + 300,000,000×20% = 80,000,000

2021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10% = 8,000,000

－ 통합투자 세액공제

$8\text{천만원} \times 10\% + (\text{추가 공제} = 0) = 8,000,000\text{원}$

2021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8,000,000 = 72,000,000$ 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8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2. 주식회사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77)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

답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4.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압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철근, 형강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2의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압연설비」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4-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 지원 대상 (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 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 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융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 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 ● 유의사항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감면 세액 추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시행령 제22조의9, 시행규칙 제13조의8

## 4-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 지원 대상

-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투자금액 \times 2\%) + (투자금액 \times \frac{(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times \frac{1}{5})$$

###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추징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시행령 제22조의11

## 4-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대상 아님)

### ● 지원 대상(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대상 아님)

- 아래 요건을 갖춘 영상제작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165))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광고나 홍보비용 제외)

#### <지원 대상 영상제작자 요건>

- (1)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
  - 1)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2)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3)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4)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 (2)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 1일 이상)된 영화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로서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 지원 내용

-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7%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 ● 용어 해설

-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영상콘텐츠 : 방송프로그램으로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방송프로그램중 다큐멘터리,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 방송프로그램 :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
- 오락 방송프로그램 :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 등급분류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167)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 지원 대상

-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

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증설의 범위>**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효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 유의사항**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거나 감면대상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면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여 확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 제118조의 2, 시행령 제104조의 21, 제115조의 3, 시행규칙 제47조의2

## 4-8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 지원 대상

- ①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법 위액으로 계산된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가.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법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75%)를 더하거나 ㄴ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
- 감가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상각부인액처리 규정은 준용함.
-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8

## 제5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 5-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지원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란?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의3, 별표7, 별표7의2\*에 나열된 비용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관련 4개분야 43개 국가전략기술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 ● 지원 내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or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나

$\frac{\text{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text{배, 한도 } 10\%(\text{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15\%)$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40%

2) 그 밖의 경우 : 30%

나.  $\frac{\text{당기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text{배, 한도 } 10\%$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일  
정비율\*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2) 중견기업의 경우 40%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3) 중견기업의 경우 :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frac{\text{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50%, 한도 2%

## ●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제외된 후 1~3년	제외된 후 4~5년		
일반 연구·인력개 발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2%를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25%
신성장 연구·인력개 발비	가 항목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나 항목	$\frac{\text{당기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text{ 한도 } 10\% (\text{코스닥상장중견기업 } 1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가 항목	40%	30%			
	나 항목	$\frac{\text{당기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text{ 한도 } 1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중소기업 한정)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1) 세액공제신청서
- 2)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3)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 ● 용어해설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p>○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p> <p>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p> <p>㉡</p> $\frac{\text{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 <p>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40%</p> <p>㉡</p> $\frac{\text{당기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 <p>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p> <p>㉠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p> <p>㉡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50%</p>	<p>○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p> <p>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25%)</p> <p>㉡</p> $\frac{\text{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 (\text{코스닥상장 중견기업})$ <p>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30%</p> <p>㉡</p> $\frac{\text{당기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 <p>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p> <p>㉠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8%, 중소기업제외 1~3년 15%, 4~5년 10%</p> <p>㉡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50%</p>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 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구·인력개발비) × 40%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 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	---

## ● R&D 사전심사 제도

### •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 R&D 사전심사 도입효과

☞ 납세자는 R&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며, 과세관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 • R&D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 도 가능하며, 금액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첨부서류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 중소기업 R&D 사전심사 신청 문의는?

☞ 각 지방 국세청에서 담당

## 5-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②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 ● 유의사항

- 사후 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1)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명세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3

### ●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함(「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임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함

## 5-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일정한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 해당기업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 ●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 유의사항

- 사후 관리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li> <li>○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li> <li>○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li> <li>○ 취득 : 취득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li> <li>○ 대여 : 해당사항 없음</li> </ul>

## 5-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 ● 지원 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 ①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②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 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단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 + ②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 50%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②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 유의사항

○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최저한세 적용대상, 단 법인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제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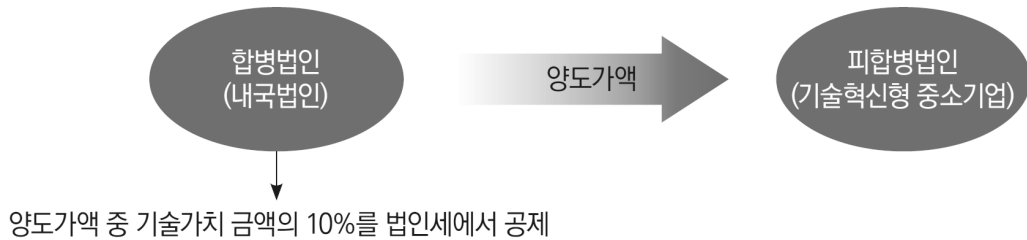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적용사례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5-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기술가치 금액이란?(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 ●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 제외

☞ 이자상당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에 따른 세액의 차액 × 기간 × 0.025%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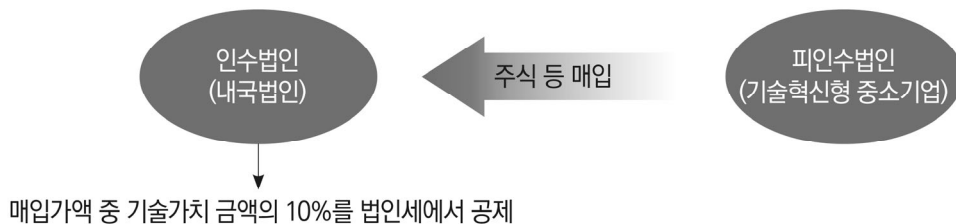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8조의5

## 5-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 ●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 ②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이하 기준지분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text{매입가액} \geq (\text{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times 1.3) \times \text{당초지분비율} *$$

\* 당초지분비율 :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 지원 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 또는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text{매입가액 중 기존가치금액} \times (\text{당초지분비율} - \text{현재지분비율}) / \text{당초지분비율} \times 10\%$$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 5-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 지원 내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특허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 유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 5-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 1.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 ●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세율	중소기업	
	일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취득세	60%	75%
재산세	50%	65%

감면세율	중소기업 이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그 외	
	일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일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일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취득세	35%	50%	50%	65%	35%	50%
재산세	35%	50%	50%	65%	35%	50%

● 유의사항

○ 사후 관리

-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적용 사례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3편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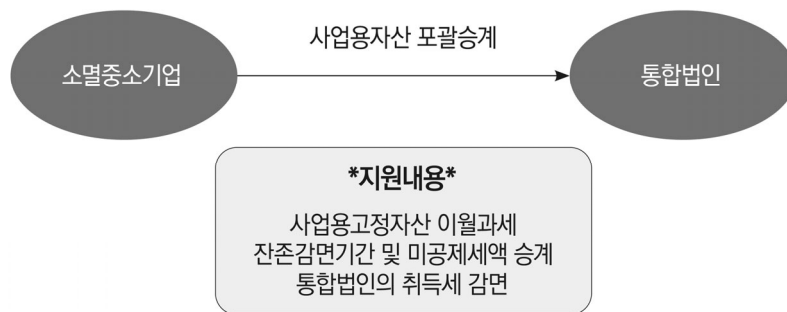
## 제6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 6-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 지원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제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 ●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 ●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징
  -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 ●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등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기타 오락·유흥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 질문과 답변

질문 1.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건물 중 한 층은 분양하고 일부 면적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

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나 사장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A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었으며, 현재 고령으로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을 유증하고자 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미리 유증할 경우, 사후관리 예외사유인 내국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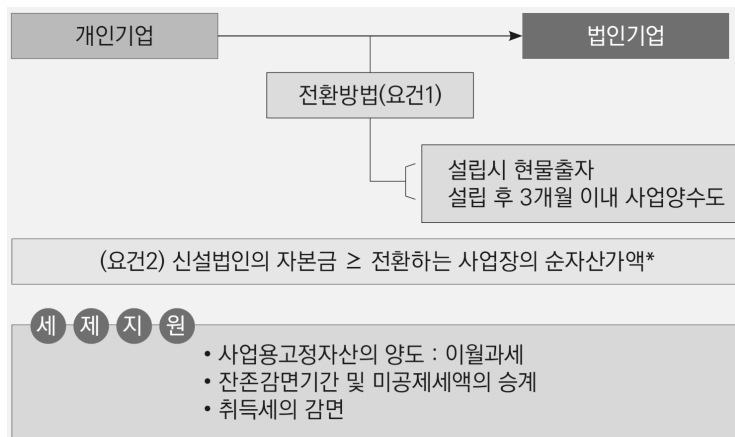
답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 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제2호의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6-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 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사업관련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경감하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 유의 사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 ● 질문과 답변

질문 1. 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니 추가세액과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라는 경정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착오로 취득가액을 잘못 인식하여 이월과세신청금액을 과소신고한 오류는 있

었으나, 어떠한 조세의 탈루나 회피 목적이 아니고 단순착오에 의한 오류인데도 이월된 양도소득세와 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춰 법인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양도시점에 납부가 가능하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사장님의 과실이 있으므로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주택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법인 전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질문 4.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LPG충전소를 2017년 6월 폐업하고 동년 11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주업종은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타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LPG 충전사업(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월과세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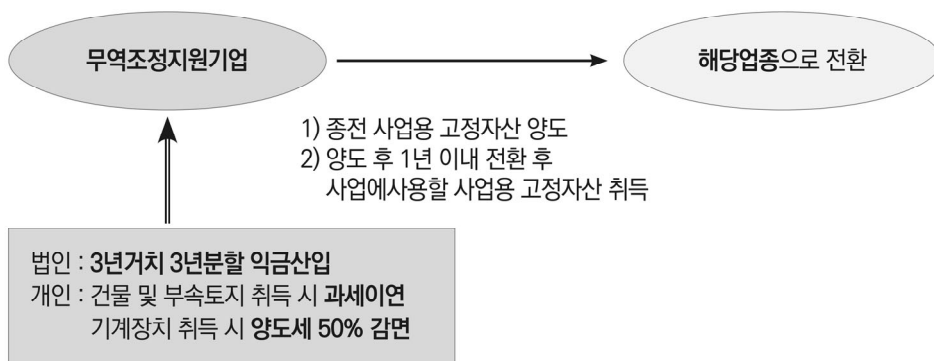
답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 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과세이연금액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세액감면액 = (전환 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전환 전 사업양도가액) × 50%

##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전환 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전환 전 사업양도가액)

## ● 유의 사항

-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1일 : 0.022%)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
  - 법인 : 해당사유발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 개인 : 해당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 제7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7-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 ● 지원 내용

- 100% 감면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다음 기간까지

-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감면
-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감면
  -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감면
-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감면
  -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감면

- 50% 감면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주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성장관리구역 및 자연보전권역(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만 적용)

(주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 ● 유의사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 ②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③ 감면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④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 ⑤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단,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제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7-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사업유자산에 대한 누적투자액)이 10억원 이상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 ● 지원 내용

- 100% 감면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감면
-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감면
  -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감면

-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감면
-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감면
-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만 적용)
-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 감면대상 소득 : [ ① × ② × ③ ]

- ①
- |              |                                      |   |
|--------------|--------------------------------------|---|
| 과세연도<br>과세표준 |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br>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br>양도차익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br>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br>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
|--------------|--------------------------------------|---|
-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 유의사항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 본사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전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본사업무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중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시행령 제60조의 2, 시행규칙 제24조

### ● 질문과 답변

질문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요?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7-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지원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또는 이전 후 사업개시일까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이 확정된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 용어 해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 7-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

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제출 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 7-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 지원 대상

-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 ●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 ● 유의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 7-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 지원 대상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나주 혁신산업단지,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광양만세풍 일반산업단지, 보령주포 제2농공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

### ● 유의사항

- 감면받은 자가 감면대상사업을 폐업 또는 법인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감면대상사업장을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 7-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회사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업회사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지원 내용**

감면 대상	감면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일정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li> <li>-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li> <li>-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li> </ul>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li> <li>-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li> </ul>

● **유의사항**

-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최저한세 적용(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 7-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 지원 대상

- ①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



- 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7조

##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되는 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 사용 부분 제외)을 포함

### ●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규칙 제8조

**7-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지원 대상**

-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240)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 유의사항

- 감면된 취득세 추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시행령 제35조의3

## 제8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8-1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및 2024년은 기업이 선택하여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기존의 고용 관련 개별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 ● 지원 대상

- ①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244)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246)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청년(15~34세) 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② 중소기업(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복귀자**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지원 내용**

① **기본공제**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및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3년 지원)		중견기업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없음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 ② 추가공제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당 세액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1년 지원)	중견기업(1년 지원)
정규직 전환자	1,300만원	900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 ● 유의사항

- ① 기본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공제 후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추징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 ② 기본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창업중 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최저한세 적용대상
- ④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27조제4항 제127조제11항, 시행령 제26조의8

## 8-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은 빼고 계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 ● 지원 내용

-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이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 세액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 일정금액\*

- 일정금액(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2021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1,3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세액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  
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0원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3년 지원)		중견기업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없음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 유의사항

- 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최저한세 적용대상
- ④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 + 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3제1항)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 사회보험

-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신성장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



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② 2.① 외의 경우 : 1.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 9-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 ● 지원 대상

1. 경력단절여성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2. 육아휴직복귀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267)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268)가 아닐 것

## ● 지원 내용

### ①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② 육아휴직복귀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271) 및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 ● 유의사항

- ①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 참고사항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 ● 법령 비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li> <li>○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을 고용(복귀)한 날부터 2년(1년)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 (15%) 세액공제</li> <li>○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신규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경력단절여성</li> <li>○ 지원내용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li> <li>○ 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명단을 신청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li> </ul>

## 8-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1)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임원
-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금액 제외)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친족(276)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재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제외)
- 단시간근로자

### (2) 지원 내용

- ①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 매출액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 제외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독립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특례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text{임금증가분}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times [1 + 0.032(\text{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times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사후 관리

-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p>○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p>일정한 요건에 따라 ①과 ② 중 선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p>②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2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div> <p>○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p>○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div> <p>○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 8-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 ● 지원 대상

- 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②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 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유의사항**

- ①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 ②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③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④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8-7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

### ■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⑤ ① ~ 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 지원 내용

-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 청년(15세~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중견기업 50%) 세액 감면

### ● 유의사항

- ①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②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절차 및 제출서류

- ① 근로자는 만기공제금 수령 후 익월 말일까지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기업)에 제출
- ②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 ● 참고서식

####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의 50% 세액감면</li> <li>• 청년은 소득세의 90% 세액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의 30% 세액감면</li> <li>• 청년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li> </ul>

## 8-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2제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한 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일정 기업

업 종	비 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 유의사항

- ① 감면의 한도는 과세기간(1.1.~ 12.31.)별로 200만원
-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105%를 원천징수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
- ③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 ●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9조의3, 시행령 제27조 제26조의3④, 시행규칙 제61조

## 제9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9-1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 ● 아래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상속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2) 피상속인 요건

###### ① 지분 요건

중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 (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②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3) 상속인 요건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

업(01~03)	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착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전체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59142)은 제외 / 방송업(60)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296)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 (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

(90~91)	(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해당업종	관련 법령	세 부 사 항
가. 직업기술 분야 학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1호커목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나. 엔지니어링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㉔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 활동, ㉔㉔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활동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다.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불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정비공장은 영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바. 선박관리업	해운법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
사. 의료기관운영업	의료법	㉔의원급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㉔조산원, ㉔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함.
아.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업)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캐도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자.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 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말한다.
차.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카.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㉔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㉕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㉖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㉗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㉘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㉙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하.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거. 연구개발지원업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너.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㉚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㉛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말한다.
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 지원 내용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1) 사업상속재산가액

-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text{주식 등 가액} \times (\text{총자산가액} - \text{사업무관자산}^* / \text{총자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2)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한도액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

###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제외

### 2)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301)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단, 이 경우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함)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4)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면서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302)

### 5)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303)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 사후관리 2023년 개정사항

구 분	2022.12.31.이전	2023.01.01.이후 (23년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																
중견기업 매출액기준	3년 평균 매출액 4천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의 지 분요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상장기업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가업상속공제 한도	<table><tr><th>피상속인 가업 경영 기간</th><th>공제한도액</th></tr><tr><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0억원</td></tr><tr><td>20년이상 30년미만</td><td>300억원</td></tr><tr><td>30년이상</td><td>500억원</td></tr></table>	피상속인 가업 경영 기간	공제한도액	10년이상 20년미만	200억원	20년이상 30년미만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table><tr><th>피상속인 가업 경영 기간</th><th>공제한도액</th></tr><tr><td>10년이상 20년미만</td><td>300억원</td></tr><tr><td>20년이상 30년미만</td><td>400억원</td></tr><tr><td>30년이상</td><td>600억원</td></tr></table>	피상속인 가업 경영 기간	공제한도액	10년이상 20년미만	300억원	20년이상 30년미만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피상속인 가업 경영 기간	공제한도액																
	10년이상 20년미만	200억원																
	20년이상 30년미만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피상속인 가업 경영 기간	공제한도액																	
10년이상 20년미만	300억원																	
20년이상 30년미만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사후관리기간	7년 이내 자산유지의무 등 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5년 이내 자산유지의무 등 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일정 요건 충족시*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5년 적용가능 *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법률제 19195호] 제7조																
자산유지의무	가업용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 처분시 추정	가업용자산의 40%이상 처분시 추정																
고용유지의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 용인원의80% 이상 ②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5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 용인원의 90%이상 ② 5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단, 종전 규정이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 속인에게 유리할 경우 종전규정 적용가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 용인원 이상 ② 7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7년 이내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또는 상속세 등 추정	5년 이내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또는 상속세 등 추정																

-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별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 용어 해설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총급여액 :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기준총급여액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 9-2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제외)
  - ① 상속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한 중소기업
  - ② 피상속인 요건
    - 1) 지분 요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2)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③ 상속인 요건<sup>321)</sup>
    - 1)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sup>322)</sup>
    - 3)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 지원 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상속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text{납부유예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text{기업상속 재산가액} / \text{총 상속재산가액}$$

### ● 유의사항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 기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

-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
  - 4)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70%에 미달하면서 기준 총급여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복적용 배제
  - 담보를 제공해야 함

###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납부유예신청서
  -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 입증서류
  - ③ 기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았거나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던 상속인이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④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서류 (재차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69조의3

## 9-3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 지원 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
  - ① 피상속인 요건
    - 1) 지분요건  
5년이상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상장법인

20%) 이상 계속 보유

2) 대표자 요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 요건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지원 내용

-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 부터 10년간 납부

$$\begin{array}{l} \text{연부연납 특례} \\ \text{대상 상속세액} \end{array}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text{가업상속공제액})}$$

① 가업상속재산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허가 후 매년 납부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text{연부연납금액} = \text{연부연납대상금액} / (\text{연부연납기간} + 1)$$

● 유의 사항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임
-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9조

## 9-4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 ① 증여자 요건
    - 1)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포함)
    - 2) 경영 요건 : 중소기업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3) 지분 요건 : 해당 기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상장법인 20%) 이상 소유
  - ② 수증자 요건
    - 1)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2)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기업에 종사
    - 3)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 ●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60억원까지 10%, 60억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  
단, 증여자의 경영기간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 한도 차등 적용

증여자(부모) 경영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한도액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  
(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 유의사항

증여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시행령 제27조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 9-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 ● 지원 대상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중견기업 제외)
  - ① 증여자 요건
    - 1)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포함)
    - 2) 경영 요건 : 중소기업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3)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상장법인 20%) 이상 소유
  - ② 수증자 요건
    - 1)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2)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 3)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 ● 지원 내용

-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text{납부유예세액} =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총 증여재산가액}$$

## ● 유의사항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
  -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2)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감소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
  - 3) 증여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70%에 미달하면서 기준충급여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적용 배제
- 담보를 제공해야 함

### ● 절차 및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납부유예신청서
  - 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7





# 한국회계기준원

##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

### 공개

- 한국회계기준원 -

#### 1. 개 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23.10.18.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일원화하여 제공하는'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함
-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기업이 직면한 회계이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및 이용 가능하도록 고안됨
- 아울러,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가 선보일 '회계정보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임

#### 2. 주요내용

- ① 회계정보 검색채널 일원화(회계기준원 및 금감원 질의회신)
-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질의회신(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정규질의, 신속처리질의)을 한 곳에 모아, 기업은 더 이상 여러 기관에서 각각 검색할 필요 없이 통합된 본 서비스에서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음

자료 원천기관	자료명	세부사항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K-IFRS 정규질의 및 신속처리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질의 및 신속처리질의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추후 제공 예정)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② 회계정보 검색기능 강화

-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일원화된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도록 설계됨
  - 기업이 회계문제에 직면했을 때 열람서비스의 '통합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관련된 모든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함

## ③ '회계질의'도 가능

###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한 곳에서 한 번에 질의 접수]

The screenshot shows the KAS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for '회계기준', '제정개정과제', '회계질의', '연구', '자료실', '소통광장', '한국회계기준원 안내', and '지속가능성기준'. The '회계질의' tab is selected. Below it, the '질의회신 접수'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callout box stating: '열람시스템 정보로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열람시스템을 제공 중인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질의 접수!'. The submission form includes instructions on how to submit questions, a '질의양식' download link, and a '정규절차 질의 바로가기' link. The footer of the page indicates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일부 발췌]'.

- 회계기준원에서는 열람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 사이트(<http://www.kasb.or.kr>)에서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

### 3. 기대효과

-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기업, 감사인 및 투자자 등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기업에게 회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회계문제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도움
    - 기업이 직면한 회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할 경우, 본 서비스가 운영 중인 회계기준원 사이트에서 회계질의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 편의를 도모함
  - 감사인은 외부감사 시 필요한 정보를 제정기관을 통하여 편리하게 습득함으로써, 신뢰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투자자는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파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투자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4. 향후 계획

-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23년 말까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24년까지 회계기준 본문과 관련 결론도출근거를 연계하는 하이퍼링크 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새롭게 공개되는 질의회신 요약과 연차개선 및 개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고용노동부 -

## 1.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 ☞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 '23.10.1. 시행 예정

### 2. 회계공시 목적

- ☞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3. 회계공시 대상

- ☞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지역별·업종별·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을 의미

(예시) 단위노동조합인 A 산업별 노동조합이 B지부를 두고 그 아래 C기업 지회를 두는 경우, C의  
상급단체는 A와 B가 됨

\*\* 산하조직은 내부조직(지부·지회·분회 등)을 의미

#### 4. 회계공시 방법

(공시내용) 2022년도\* 결산정보(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항목 등)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작성('23.10.1.  
운영 개시)

\* 위 주소 이외에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labor.moel.go.kr>)를 통해서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 가능

\*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FAQ의 『사용자 매뉴얼』 참고(공시 등  
록기간) '23.10.1.~11.30.(2개월 간)

#### 5. 회계공시 혜택

☞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정보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  
을 부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 '23.10.1. 시행 예정)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  
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①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  
요

\*\* ②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 결산정보 공시를 전제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있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여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상급단체의 경우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회계공시 범위 예시 >

(예시1) A 산업별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이 甲 총연합단체(10,000명)에 가맹하였고, A  
가 산하조직으로 B 지부(1,000명)와 C 지부(500명)를 둔 경우



① 甲, A, B가 공시하면 B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② 甲, A가 공시하면 C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예시2)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D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의 경우 : D가 공시하면 D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예시3)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E 노동조합(조합원 수 500명)의 경우 : E의 공시여부에 관계 없이 E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6. 회계공시 제도설명·교육 안내

(교육내용) 노동조합 회계 관련 기본 교육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교육방법)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노동조합회계 공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https://youtube.com> 접속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온라인 교육" 검색 ('23.9.25.부터 시청 가능)

\*\* <http://labor.moel.go.kr/pap> 접속 → FAQ 게시판 ('23.10.1.부터 시청 가능)

## II. 노동조합 회계공시 항목

### 1. 노동조합 회계의 의미와 중요성

- 노동조합 회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예금, 상품, 건물, 비품, 채권, 채무 등 각종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기록·계산·정리하여 재정운영 성과, 재무상태 등 결과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노동조합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집행부(임원)는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선출한 대리인으로서 재정 집행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조합원에게 보

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노동조합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노동조합 회계의 구성요소

- 노동조합 회계는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 ① 재무상태표 : 회계연도 말일 기준의 재무 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 자산 : 현금, 예금, 토지, 건물 등 노동조합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 부채 :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② 수지계산서 :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현금의 유입)과 지출(현금의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
- 조합원은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산·부채 현황과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표준서식은 노동조합의 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작성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3. 노동조합 회계 공시항목

### 가. 회계 구분

- 노동조합이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를 운영하는 경우, 각 회계별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일반회계 :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정기예금 등 적립금 회계, 기금회계(예 : 쟁의기금),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 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
- 보조금사업회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
- 수익사업회계 :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회계

### 나. 자산 및 부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자산	현금 및 예금	토지	건물	기타자산	부채
㉠ 총계(=㉡+㉢+㉣+㉤)						
㉡ 일반회계						

㉔ 특별회계						
㉕ 보조금사업회계						
㉖ 수익사업회계						

－ 자산 :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① 현금 및 예금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에 금의 가액

② 토지 :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임야, 전답, 건물부속토지,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

③ 건물 :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④ 기타자산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매출채권, 단(장)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임차보증금 등 현금·예금, 토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예 :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미회수분)

• 단(장)기대여금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권(재무상태표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그 외는 "장기"로 분류)

•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예 : 조합비미수금)

• 미수수익 :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예 : 정기예금 미수이자)

• 선급금 :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

－ 부채 : 매입채무, 단(장)기차입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예수금, 퇴직급여 총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출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

• 단(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년 이내(단기) 또는 1년을 초과하여(장기) 상환될 차입금

•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예 : 비품을 취득한 후 회계연도말 이후 지급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향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

• 예수금 : 장차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채무로 일단 금전을 받고 그 후 타인 또



는 그 타인을 대신하는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채무(예 : 급여 관련 4대 보험료, 원천세)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수입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수입 총계	전년도 이월금	조합비	상급 단체 교부금	하부 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입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 수입 총계 : 당기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합계

－ 당기 수입 :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 유입

- ① 조합비 :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
- ② 상급단체 교부금 :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
- ③ 하부조직 부과금 :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예 : 가맹비, 의무금)
- ④ 후원금 : 조합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 ⑤ 타회계 전입금 : 회계 간 전입으로 인한 수입 금액, 지출현황의 "타회계 전출금" 지출금액과 일치
- ⑥ 보조금 수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 ⑦ 수익사업 수입 :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 수입 총액
- ⑧ 기타 수입 : 수입 중에서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입,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 전년도 이월금 : 회계별로 전기 말 현금 및 예금의 잔액

라. 지출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㉘ 지출 총계 (=㉙+㉚)	㉙당기 지출						
		㉚일반관리비용			㉛사업수행비용			
		㉜ 인건비	㉝업무 추진비	㉞기타 운영비	㉟ 총회 등 대회비	㊱조직 사업비	㊲정책 사업비	㊳교육· 홍보 사업비
㉙ 총계(=㉚+㉛+㉜+㉝+㉞)								
㉚ 일반회계								
㉛ 특별회계								
㉜ 보조금사업회계								
㉝ 수익사업회계								

지출현황(계속)							
(단위 : 원)							
구분	29당기 지출(계속)						49차년도 이월금
	34사업수행비용(계속)		41상급 단체 부과금	42하부 조직 교부금	43타회계 전출금	44 기타지출	
	39 교섭·쟁의 사업비	40기타 사업비					
a 총계(=b+c+d+e)							
b 일반회계							
c 특별회계							
d 보조금사업회계							
e 수익사업회계							

- 지출 총계 : 당기 지출과 차년도 이월금의 합계

- 당기 지출 :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 유출

① 일반관리비용 : 사무국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

- 인건비 :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업무추진비 : 임·직원의 직급·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및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기타운영비 :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 사무국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사업수행비용 :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총회 등 대회비 :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사업비 : 신규 조합원 가입,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 신설·확대·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정책사업비 :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교육·홍보사업비 : 신규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교섭·쟁의사업비 :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쟁의·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
  - 기타사업비 : 사업수행비용 중에서 총회 등 대회비, 조직사업비, 정책사업비, 교육·홍보사업비, 교섭·쟁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 ③ 상급단체 부과금 :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등(예 : 가맹비, 의무금)
- ④ 하부조직 교부금 :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등
- ⑤ 타회계 전출금 : 회계 간의 전출로 인한 지출로, 수입현황의 "타회계전입금" 수입금액과 일치
- ⑥ 기타 지출 : 지출 중에서 일반관리비용, 사업수행비용, 상급단체부과금, 하부조직교부금, 타회계전출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수입총계"에서 "당기 지출"을 차감한 금액

## 마. 점검사항

- 수입 총계 = 당기 수입 + 전년도 이월금  
지출 총계 = 당기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예시) 2022년의 현금 유입, 즉 당기 수입이 200만원이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원이라면, 수입 총계는 당기 수입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5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이 됩니다.  
이때, 2022년의 현금 유출, 즉 당기 지출이 100만원이라면, 수입 총계 7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600만원은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되고, 지출 총계는 당기 지출 100만원에 차년도 이월금 6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수입 총계 700만원과 금액이 같습니다.
- 전년도 이월금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현금 및 예금  
차년도 이월금 = 당해 회계연도 말 기준의 현금 및 예금


- (예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원이라면, 이는 2021년 12월 31일의 현금 및 예금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현금 및 예금 잔고가 500만원이어야 이를 2022년 1월 1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 즉 차년도 이월금이 600만원이라면, 이는 2022년 12월 31일의 현금 및 예금과 같습니다.
- 타회계 전입금 총계 = 타회계 전출금 총계
  - (예시) 특별회계 재정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만원을 전출한다면, 일반회계의 입장에서 타회계 전출금은 1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입장에서 타회계 전입금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타회계 전출금과 타회계 전입금이 일치합니다.



#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 고용노동부 -

## 1.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Q&A 1

(Q)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어떠한지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를 준용하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 Q&A 2

(Q)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어느 단계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A)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2. 거짓 채용광고 금지 (제4조제1항)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 ☑ Q&A 3

(Q) 거짓 채용광고 금지와 직업안정법 등 유사한 다른 법률조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A)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금지"에서 규율하고 있고, 채용절차법은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직업안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절차법의 거짓채용광고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모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규정한 직업안정법과 다소 상이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제4조제2항)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Q&A 4

(Q) 제4조제2항의 "채용광고 내용"을 명문으로 적시한 사항에 국한해야 하는지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지

(A) 과태료가 부과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확장·유추해석이 아닌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석은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 Q&A 5

- (Q) 채용공고 당시에 원서접수 방식을 우편접수로 공지하였으나, 지원자의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방문 제출한 채용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
- (A) 법은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구직자에게 이익이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함. 채용서류 접수방식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서,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움

☑ Q&A 6

- (Q) 채용공고 이후 서류합격자에 대한 1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면접 당일 오전 회사가 이메일·문자를 통해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중단을 고지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 (A)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와 달리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이라면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 채용광고에는 채용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광고를 신뢰하고 응시하는 것임. 채용광고의 내용인 채용절차는 구직자의 보호이익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의 중단은 절차의 완결과 채용가능성을 기대하고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기대를 귀책없이 박탈하는 것이므로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음

☑ Q&A 7

- (Q) 경력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근무형태를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기재하였으나, 구직자가 채용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다음날 회사의 채용담당자로부터 사내 규정상 계약직 채용 진행이 원칙인데 담당자 실수로 채용공고를 잘못 올렸다면 모집하고 있는 직렬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A) 채용단계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담당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함

☑ Q&A 8

- (Q) K사는 채용단계별 합격자가 지역인재비율 목표에 미달 시 합격선에 미달한 지역인재 일부를 추가 합격시킨다는 채용목표제를 공고하였으나, 공고와 달리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한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A) 추가합격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에서 채용공고 내용대로 추가 선발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용공고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역인재로서 구직에 응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 채용공고 내용의 사후적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

#### 4.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제4조제3항)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Q&A 9

- (Q) "채용한 후"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 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 (A) 채용절차법은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채용과정을 규율하는 법으로, "채용한 후"의 의미는 합격자를 내정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

##### ☑ Q&A 10

- (Q) 채용광고에 고용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경력 조건으로 경력 5년 이상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경력 2년의 구직자에 대하여 면접 과정에서 경력이 짧아 시용기간을 두고 급여는 재협상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후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변경으로 위법이 아닌지
- (A)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된 후에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채용한 후가 아닌 채용 전 면접 과정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 및 시용 등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 ☑ Q&A 11

- (Q)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실제 출근일이 도래하기 전 조직개편으로 담당업무 등의 변경을 통보받아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위법한지



- (A)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추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나, 구인자의 고의에 따른 불리한 변경인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Q&A 12

- (Q) 채용광고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 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한지
- (A)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습 기간은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수습계약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부정하게 되거나, 시용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음

☑ Q&A 13

- (Q) 채용광고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 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 근무 요일, 장소,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경우, 위법한지
- (A) 수습 기간 중 근무 요일, 장소,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채용 후 채용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나, 최초의 근로계약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위한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구인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5. 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2)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Q&A 14

- (Q)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업체에 채용되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른 노조 조합원이 채용에 반발하여 업체의 대표에게 항의하고 해고할 것을 종용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 (A)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자기 조합원의 채용강요를 하는 일 없이 단순히 해고를 종용하는 것은 채용단계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로 채용절차법 적용이 불가함 → 종합적 판단 필요

☑ Q&A 15

- (Q) 건설현장에서 A노조 조합원이 채용 약속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노조에서 고소·고발 등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A노조 조합원의 해고를 강요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 (A) 법령을 위반하여 압력이나 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직·간접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음

\* (법령 위반) 법에서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경범죄 처벌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민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모든 법령\*을 포함,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포함,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도 포함됨

\* (채용 압력) 他 법률, 판례에서도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감사기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등에 규정된 압력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인자의 자유의사(독립성)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로 해석

\* (채용 강요) 「형법」 상 강요죄를 준용, 구인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구인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채용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Q&A 16


- (Q)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는지

- (A) 해당 조항의 주요 법익인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에서 채용담당자란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채용 업무를 위임한 법인 등 사업장의 대표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임원, 채용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역시 부당한 청탁으로 볼 수 있음

☑ Q&A 17

- (Q) A가 지인 B를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 C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채용 청탁을 전달(또는 유인)한 B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 (A) 제4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청탁을 받은 C를 제외하고 채용 청탁을 한 A와 이를 전달(또는 유인)한 B 모두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6.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Q&A 18

- (Q) 신체적 조건 중 혈액형, 시력, 색맹, 원손잡이 여부와 취미, 특기 정보 수집은 가능한지
- (A) 채용절차법에서 요구 금지하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므로 혈액형, 시력, 색맹, 원손잡이 여부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님. 취미, 특기에 관한 정보는 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요구 가능함

☑ Q&A 19

- (Q) 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이력서에 등록기준지, 사진 및 생년월일을 기재 및 제출 요구하였는데, 위반이 아닌지
- (A) 입사지원서에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을 요구한 것으로 동 조항에 위반되고, 생년월일, 사진은 채용절차법상 수집 금지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 ☑ Q&amp;A 20

(Q) 구직자 본인의 주소정보는 요구 가능한지

(A) 채용절차법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말함. 대부분의 국민이 성인이 되면 대학진학,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출신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구 가능함

## ☑ Q&amp;A 21

(Q)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요구가 가능한지

(A) 생활기록부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생활기록부에 법상 수집이 금지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요한 정보(출결사항, 인·적성 기록 등)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Q&amp;A 22

(Q) 대학에서 연구원 채용을 진행하며,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으로 가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위반이 아닌지

(A)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제2호)하고 있고, 혼인여부에는 기혼 뿐만 아니라 미혼인 경우 역시 수집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혼인 유무가 드러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동 조항에 위반

## ☑ Q&amp;A 23

(Q) 채용 이후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본인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은지

(A) 채용절차법은 채용단계에서 적용되며,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무방함

## ☑ Q&amp;A 24

(Q)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외 다른 개인정보도 수집이 금지되는지(구직자 본인의 학력, 출신학교, 성별, 연령 등)

- (A) 동 조항은 예시형식이 아닌 열거식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침익적 행정행위가 수반되므로 열거된 항목 외의 개인정보 수집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는 가능함)

☑ Q&A 25

- (Q) 구직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요구 금지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지  
(A) 동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구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요구 금지된 정보가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면 수집이 불가하며, 구직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Q&A 26

- (Q) 사업장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구직자가 요구금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동 조항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인자가 요구하지 않았으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만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공고문이나 이력서 양식에 채용절차법상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 Q&A 27

- (Q) 면접에서 질의를 통해 제4조의3에 기재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키(신장), 출신지역, 혼인 여부 및 혼인 기간, 출산 가능성 등)를 물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A) 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로서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면접상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경우,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용절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남녀 차별 등에 있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면접기술서 등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개정법안('23.5.22 발의)에는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포함

☑ Q&A 28

- (Q) '19.7.17. 채용절차법 개정 전 구인공고에 요구금지 정보가 요구되어 있다면 채용절차법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 Q&A 29

- (Q) 구인대행업체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요구금지 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디인지
- (A) 채용절차법 4조의3은 구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구인의 주체인 사업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

☑ Q&A 30

- (Q) 채용기관이 건강상태와 직무수행의 관계가 없음에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 (A) 법에 채용심사 기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4조의3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일괄적인 신체검사에서 제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7.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9조)

☞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 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Q&A 31

- (Q) 행정기관의 비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시 구직자 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A)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구인자 부담)

☑ Q&A 32

- (Q) 구직자가 원거리에서 면접에 응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등 면접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 (A)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는 비용과 채용서류 준비비용은 채용 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함. 아울러, 왕복교통비, 숙박비 등 필기 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하는데 지출되는 실비도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채용 심사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채용서류 준비비용) 증명사진 등 촬영비,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제본비, 각종 자료의 출력·복사·스캔 등에 따른 비용 등
- \* (채용서류 제출비용) 오프라인의 경우 왕복교통비, 우편요금, 택배요금, 쿼서서비스요금 등,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사용 요금 등

☑ Q&A 33

- (Q) 채용기관이 서류·면접 합격 후 신체검사서를 대체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 (A) 수행할 직무와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어 불가피하게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경우라 할지라도, 검진 종류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구인자 부담)

☑ Q&A 34

- (Q) 채용 시 건강진단서의 법적 의미와 비용 부담 주체는
- (A) 의미상 건강진단서는 「채용절차법」 상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진단서는 채용될 경우 회사에 종사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용도나 성격에 있어서 채용서류와 상이한 점,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서를 채용서류로 분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할 것임(구인자 부담)

☑ Q&A 35

- (Q) 채용절차가 종료된 후 입사 시기 조율을 위해 "최종 채용 합격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건강검진 비용부담 주체는 회사인지

- (A)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시기는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채용절차'상에 있지 않은 점, 건강검진 목적이 채용심사가 아니라 최종 합격된 근로자의 입사 시기를 확정·조율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 비용은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Q&A 36

- (Q) 구직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되는지

- (A)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로 보기 어려움(구인자 부담)

\* (다른 견해)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 →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Q&A 37

(Q)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반환·보관·파기 의무가 없는지

(A) 반환 및 보관의 의무는 없으나 파기 의무는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실을 구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서류 보관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Q&A 38

(Q)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모든 채용서류는 예외 없이 파기해야 하는지

(A) 채용절차법에서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상 보존대상인지에 따라 다름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법을 적용받으며 공공기관이 접수한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채용서류가 개별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는지,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등록·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9. 기타 Q&A

☑ Q&A 39

(Q) 민원이 취하된 경우도 계속 조사하여야 하는지

(A)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사항이 인지되었다면 민원이 취하되었더라도 행정기관은 계속 사건조사, 과태료부과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Q&A 40

(Q) 채용절차법에서 '채용'의 의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A) 법 제3조는 적용범위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채용절차법의 취지 및 적용 대상, 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채용절차법에서 '채용'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채용절차'로 봄이 타당함

#### ☑ Q&A 41

(Q) 채용절차법 외에 채용에 적용되는 법률은 없는지

(A) 채용절차법 외에도 채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어 준수가 필요함

##### <법령 예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②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생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4일(수)	10월 5일(목)	10월 6일(금)	10월 10일(화)
미 달 러 (USD)	1351.30	1360.60	1349.40	1348.30
위 안 화 (CNH)	184.68	185.76	184.31	184.44
일 본 엔 (JPY)	906.27	913.37	909.08	908.25
유 로 화 (EUR)	1414.20	1429.45	1423.21	1425.09
영 국 파 운 드 (GBP)	1631.56	1651.36	1644.92	1650.45
캐 나 다 달 러 (CAD)	985.70	989.82	984.50	992.02
홍 콩 달 러 (HKD)	172.53	173.79	172.32	172.22

통 화 명	10월 11일(수)	10월 12일(목)	10월 13일(금)	10월 16일(월)	10월 17일(화)
미 달 러 (USD)	1348.30	1339.60	1339.90	1349.40	1353.80
위 안 화 (CNH)	185.00	183.68	183.63	184.70	185.25
일 본 엔 (JPY)	907.55	898.97	894.73	901.98	905.10
유 로 화 (EUR)	1430.28	1423.06	1411.32	1419.43	1429.21
영 국 파 운 드 (GBP)	1657.13	1649.92	1632.07	1639.72	1653.40
캐 나 다 달 러 (CAD)	992.67	985.80	978.89	988.93	994.34
홍 콩 달 러 (HKD)	172.43	171.30	171.26	172.45	173.17

통 화 명	10월 18일(수)	10월 19일(목)	10월 20일(금)	10월 23일(월)
미 달 러 (USD)	1351.90	1351.70	1357.60	1355.10
위 안 화 (CNH)	184.75	184.76	185.41	184.76
일 본 엔 (JPY)	902.56	901.95	906.18	904.15
유 로 화 (EUR)	1429.57	1424.49	1436.34	1435.32
영 국 파 운 드 (GBP)	1646.61	1641.37	1647.99	1648.14
캐 나 다 달 러 (CAD)	990.44	985.56	989.43	988.73
홍 콩 달 러 (HKD)	172.79	172.64	173.50	173.20

통 화 명	10월 24일(화)	10월 25일(수)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미 달 러 (USD)	1353.20	1343.90	1347.00	1357.10
위 안 화 (CNH)	184.48	183.94	184.18	185.18
일 본 엔 (JPY)	903.97	896.74	896.98	902.42
유 로 화 (EUR)	1443.73	1423.66	1422.97	1433.50
영 국 파 운 드 (GBP)	1657.47	1634.18	1629.94	1646.84
캐 나 다 달 러 (CAD)	988.46	977.88	975.84	981.91
홍 콩 달 러 (HKD)	172.95	171.78	172.21	173.53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생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z.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